



보도시점 2025. 9. 10.(수) 06:00 < 9.10.(수) 석간 >

배포 2025. 9. 9.(화)

해상풍력 인허가 속도낸다,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출범

- 범정부 해상풍력 T/F 킥오프 회의 개최
- 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국내 해상풍력 가속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과제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해, 9.10(수) 오전 8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국내 입지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원으로서 탄소중립, AI 시대를 견인할 주력전원이자, 조선, 철강 등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미래 핵심산업이다.

아직 국내에서 운영중인 해상풍력은 총 0.35GW 수준이나, 정부는 '22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 도입 후 총 4.1GW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선정하였고, 해상풍력특별법('25.3월 공포)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해상풍력의 본격적인 보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에 금일 킥오프 회의에서는 초기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복잡한 인허가, 인프라 부족, 금융 조달 등 주요 애로를 해소하고, 향후 국내 해상풍력의 보급 가속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호현 산업부 제2차관은 “모든 전문가가 지금이 국내 해상풍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낙찰 사업 4.1GW 성공적인 정착이 앞으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의 전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시기를 실기하지 않기 위해 관계부처 모두가 원팀이 되어 인허가 가속화, 인프라 확보, 금융지원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재생에너지보급과	책임자	과 장	권기찬 (044-203-5380)
		담당자	사무관	조현진 (044-203-5382)

1. 회의 개요

- (목적) 해풍법 시행('26.3월) 이전, 해상풍력 프로젝트별 인·허가 및 제약사항 해소, 인프라 지원, 금융 강화 등을 통한 해풍 보급 가속화
- (일시/장소) '25. 9. 10.(수), 8:00~9:30 / 여의도, 전력기반센터
- (참석자) 산업부 2차관(주재),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관계부처(국방부, 해수부, 환경부, 금융위, 기재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 해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TF 구성(안) >



* 운영기간 : '26.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전까지

- (내용)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부처별 추진방안 발표(중앙부처)
 -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지자체별 건의사항 발표(지자체)

2. 세부 일정(안) : 차관님 모두 발언까지 공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8:00~8:05	5'	▶ 모두 발언	산업부 2차관
8:05~8:07	2'	▶ 장내 정리 및 기자단 퇴장	-
8:07~8:20	13'	▶ 발제 : 해상풍력 추진현황 및 과제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
8:20~8:45	25'	▶ (중앙부처)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부처별 추진 방안 (부처별 5분 발표)	국방·해수·환경부, 금융위, 기재부 등
8:45~9:01	16'	▶ (지자체) 추진 현황 및 건의사항(각 4분 발표)	전남·전북·울산·충남도 등
9:01~9:25	24'	▶ 의견 청취 및 토론 * 인허가, 인프라, 금융 등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필요과제 및 관계기관 협력사항 논의	중앙부처, 지자체, 한전 등 참석자 전원
9:25~9:30	5'	▶ 마무리 발언	산업부 2차관